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전개요

청구인은 20○○. ○○. ○○.부터 인천광역시 ○○○구 ○○로 ○○○-○, ○층 (○○동)에서 ‘○○○○○○’ (이하 ‘이 사건 업소’ 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청소
년게임제공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20○○. ○○. ○○.경 청구인이 사건 업소 내
에 설치된 경품뽑기 게임기에 5,000원 이상의 경품인 ○○만원 상당의 ‘○○○○○
○’ 등을 제공한 행위로 인천○○○경찰서에 적발되었다. 이를 통보받은 피청구
인은 20○○. ○○. ○○. 청구인에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게임
산업법’ 이라 한다) 제28조제3호 경품지급기준 1차 위반을 사유로 영업정지 ○○
일의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하였고, 20○○. ○○. ○○.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
일(20○○. ○○. ○○. ~ ○○. ○○.)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구인은 ① 미필적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 ② ○○아이를 부양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수입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 ③ 채무 변제 등 경제적 어려움
은 물론 정신적·육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④ 이번 사건으로 경품취급기준을 위반하는 것이 중대한 범죄임을 알았고,
그간의 심적 고통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구인은 본인의 위법행위를 인정하고 있고, 법을 준수하는 행위보다 자신의 이익이 더 중요하여 위법한 행위를 하였기에 이는 명백하게 게임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해태한 것이다.

또한, 피청구인은 명백한 위반사실에 근거하여 영업정지라는 침익적인 행정처분을 하기에 앞서 청구인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경제적 사정을 최대한 고려하여 사법처분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보류하였고, 청구인이 원하는 날짜를 영업정지 기간으로 정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생활이 어려워도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는 타 업소와의 형평성 및 영업질서를 바로잡고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목적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심판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 · 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5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별표5]

나. 사실관계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련자료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20〇〇. 〇〇. 〇〇.부터 인천광역시 〇〇〇구 〇〇로 〇〇〇-〇, 〇층 (〇〇동)에서 ‘〇〇〇〇〇〇’이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2) 청구인이 불상의 일시부터 20〇〇. 〇〇. 〇〇.경까지 이 사건 업소 내에 설치된 경품뽑기 게임기에 〇〇만원 상당의 경품인 ‘〇〇〇〇〇〇’ 등을 제공한 행

위로 인천○○○경찰서에 적발되었고, 인천○○○경찰서장은 20○○. ○○. ○○. 이 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3) 위 2)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통보받은 피청구인은 20○○. ○○. ○○. 청구인에게 게임산업법 제28조 경품지급기준 1차 위반을 사유로 영업정지 ○○일의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하였다.

4) 청구인은 ‘법원의 처분 확정 전까지 행정처분을 유예해달라’고 피청구인에게 의견을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 ○○. ○○. 행정처분 유예를 통보하였다.

5) 위 2)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20○○. ○○. ○○. 인천지방법원으로 부터 벌금 ○백만 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6) 피청구인은 20○○. ○○. ○○.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일(2020. ○○. ○○. ~ ○○. ○○.)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다. 판 단

1)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게임산업법 제28조제3호에서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면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5조제2항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공업 등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하였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경품의 종류 등) 제2호 경품의 지급기준에서 지급되는 경품은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5천원 이내의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관련 [별표5] 행정처분의 기준을 보면 2. 개별기준 라목 3)에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법 제28조제3호 및 영 제16조의2를 위반하여 경품을 제공한 때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월’의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게임산업법 제28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호에서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지급되는 경품은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5천 원 이내의 것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 내 설치된 게임기에 ○○만 원 상당의 경품인 ‘○○○○○○’를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한 행위로 20○○. ○○. ○○.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백만 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은바 이 사건 위반사실이 인정된다.

나) 청구인은 고의성이 없었던 점과 청구인의 관련법에 대한 무지함과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바라나,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청구인은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청소년을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의무를 관련 법령으로 부여받고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것이 분명해 보이는 점, 다른 유사 사례의 빈발을 막고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법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